

민선 7기 도정 아듀... '행복한 전남 실현' 구축

개인소득 2,010만원 10위 달성 공약이행평가 전 부문 최고등급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전남도는 민선7기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 값진 성과와 의미있는 변화로 전남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행 행복시책 등을 대거 발굴·시행해 행복한 전남 실현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7위에 머물던 개인소득은 2021년 2,010만 원으로 역대 최고인 10위로 올라섰고, 지역내총생

산(GRDP) 8위, 근로자 평균 급여소득 전국 7위를 달성했다.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 예산은 4년 만에 11조 원으로 늘고, 국고예산도 8조 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

외부평가에선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모든 부문 최고 등급,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사상 첫 전국 1위로 나름 두각을 보였다.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유치도 활발했다. 데이터센터, 2차전지 소재 등 1,002개 기업과 2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고, 이 중 557개(56%)가 투자하는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2018년 38.2%였던 산단 분양률은 적극적 기업 투자유도와 중점 관리로

지난해 6월 기준 79.4%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전남 노후산단을 미래형 저탄소·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제도약을 이끌 정부 산단 대개조 공모에도 잇따라 선정됐다. 2020년 1조 2,000억 원 규모 광양만권 산단 선정에 이어, 올해 3,600억 원의 서남권 산단 사업도 확정했다.

전남의 청정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비전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도 새롭게 제시해 혁신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세계 최초 에너지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추진, 500만 호남인 한마음을 모은 끝에 지난 3월 개교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는 정부 지역균형뉴딜 투어의 첫 행사로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협약 선포식을 개최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12만

개 창출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의 염원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대거 확충,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목표와 부산을 2시간으로 오가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남해안 해저터널 등이 대표적이다.

체육형 관광산업 실현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성과도 냈다. 진도 대명리조트, 신안 씨윈아일랜드 등 명품 숙박시설을 늘렸다. 2021년 광양에 전남도립미술관을 개관,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소득 창출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연 60만 원을 지원했다. 온라인물 남도장터

는 모바일업, 판매영역 확대 등으로, 2018년 5억 원이던 매출액을 지난해 552억으로 100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

소소하지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행 행복시책도 시행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형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로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해 수혜자의 95.6%가 만족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2021년 섬 주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여객선'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남 청년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주는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73년 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목표 유치,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착공, 신안과 순천·보성 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김용현 기자



이형석 의원(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혁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 혁신 결의문 채택

“반성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 16명이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며 지난달 30일 혁신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당의 심장이었다고 이정표였던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성원했지만, 민주당은 호남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결국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으며 예고된 패배였다”며 “특히 광주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운영을 맡기면서도, 37.7%라는 전국 최

저 투표율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 호남은 민주당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입법권력을 과반 넘게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돌보는데 진력하고 개혁의 발걸음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고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강력한 민생개혁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

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둘째, 다가오는 8·28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셋째, 지도부 선출에 당원과 국민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원과 국민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 넷째,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다.

의원들은 “광주·전남 의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상생 발전과 민생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의 윤영덕, 조오섭, 이형석, 이용민 의원과 전남의 이개호, 김승남, 윤재갑, 서동용, 김원이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607-2672

민주당, 광주 동·남·북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서·광산구는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30일 각 자치구 제9대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광주 동·남·북구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부의장 출마 후보를 전원 합의 방식으로 선출했다.

동구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민주당 소속 5명이 김재식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이지에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다.

남구의회는 전체 1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10명이 3선의 황경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재선의 남호현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북구의회는 전체 의원 20명 중 민주당 소속 17명이 재선의 김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4선의 최무송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정수 13명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의장에 재선의 고경애 의원을 후보로 잠정 합의했으며, 부의장 후보는 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

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는 전체 의원 18명 중 14명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5개 자치구 의회는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 9대 의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동구·남구·북구의회는 4일 9대 의회 첫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광산구의회는 5일, 서구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조오섭,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이 지난달 30일 보호종료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뢰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할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

세 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돼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 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